

보도시점 (온라인) 2026. 5. 31.(일) 12:00  
(지면) 2026. 6. 1.(월) 조간

## 대한민국 지방자치 78년의 발자취 대통령기록물 38건 공개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기로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중요 사료 38건 공개
- 1948년 제헌헌법부터 역대 정부 지방자치 발전계획까지 한눈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를 맞아 우리나라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담은 대통령기록물을 6월 1일(월)부터 ‘대통령기록 포털(www.pa.go.kr)’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기록물은 1948년 제헌 헌법과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지방자치가 첫발을 댄 초기 기록부터,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을 거쳐 1995년 6월 27일 전면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해 온 과정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총 38건의 중요한 사료다.

### >> 노무현 대통령 친필 메모부터 역대 대통령의 투표 사진까지 자치분권 확대의 기록 망라

우선 이번 공개 대상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헌헌법(1948년)」과 지방자치 시작의 신호탄이 된 「지방자치법(1949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회계에 통일적인 질서를 세운 「지방재정법(1963년)」 등 핵심 법령 기록물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자치제도를 최초로 실시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계획(1991년)」과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선언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부른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담화문(1995년)」도 함께 포함됐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구상한 「지방분권과 국가적 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한 기본구도(2003년)」를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2005년)」과 생생한 고민이 담긴 「친필메모」가 공개되어 눈길을 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2008년)」과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년)」까지 이어지며 자치분권을 확대하려 했던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지방선거에 직접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 사진도 함께 공개되어, 시대마다 지방자치를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삼아온 대통령들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이달의 기록 공개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1948년 제헌헌법부터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가의 중요한 사건과 연계하여 의미 있는 대통령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조상민 (044-211-2200)
		담당자	연구관	안대희 (044-211-2251)
		담당자	연구사	이철환 (044-211-2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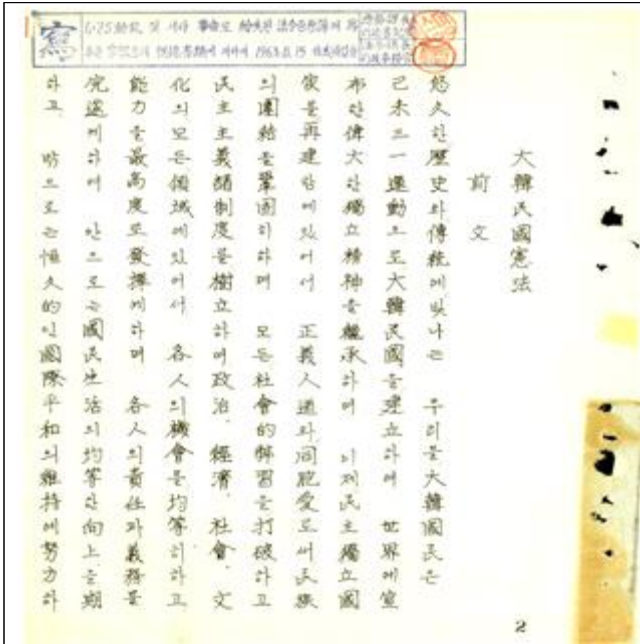


○ 대한민국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제도·정책 관련 주요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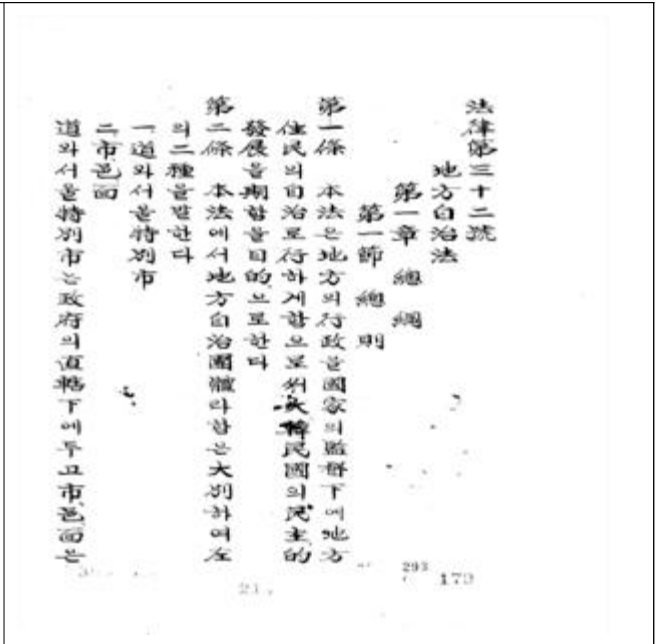
연번	대통령	생산일	건제목
1	이승만	1948.7.	제헌 헌법
2	이승만	1949.02	지방자치법
3	윤보선	1960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제563호)
4	윤보선	196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
5	박정희	1963	지방재정법
6	박정희	1965	지방에 대한 업무 이관
7	박정희	1965	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답변서 이송
8	박정희	1973	행정권한의 지방 위임문제(총무처 보고)
9	전두환	198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개정법률(제3412호)
10	전두환	1989	1989년도 주요업무보고
11	노태우	1991	1991년도 주요업무계획
12	노태우	1991	지방의회의원선거실시계획
13	김영삼	1995	선진국의 자치단체장 선출
14	김영삼	1995	지방선거실시에 즈음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
15	김영삼	1996	지방자치제도 발전위원회 규정(제14898호)
16	김대중	1998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안
17	김대중	2000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추진
18	김대중	2000	지방이양확정사무 후속 행정계획 및 지방이양시기에 대한 기본원칙보고(제2호, 제2회)
19	김대중	2003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한 기본구도
20	노무현	2003.1.1.	지방 특성화 발전(인수위 국정토론 자료)
21	노무현	2003.9.8.	친필 메모
22	노무현	2004.10.28.	친필 메모
23	노무현	2005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안 보고
24	노무현	2005	민선 지방자치 10년 평가결과 및 향후 발전방향 서면 보고
25	노무현	2007.9.17.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
26	이명박	2008.11.28.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안)
27	이명박	2013.2.1.	제3실무위원회 제33차 회의 안건(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제3실무위원회)
28	박근혜	2013.5.2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9	박근혜	2014.2.3	지방분권 추진과제
30	문재인	2018	자치분권 종합계획 보고

○ 역대 대통령과 지방선거 투표

연번	대통령	생산일	건제목
1	이승만	1956	시의원 투표 모습 (이승만 대통령)
2	노태우	1991.03.05	광역선거투표 (노태우 대통령)
3	김영삼	1995.06.27	지방자치단체장 투표 (김영삼 대통령)
4	김대중	2002	6.13 지방선거 (김대중 대통령)
5	노무현	2006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노무현 대통령)
6	이명박	2010.05.24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이명박 대통령)
7	박근혜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박근혜 대통령)
8	문재인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문재인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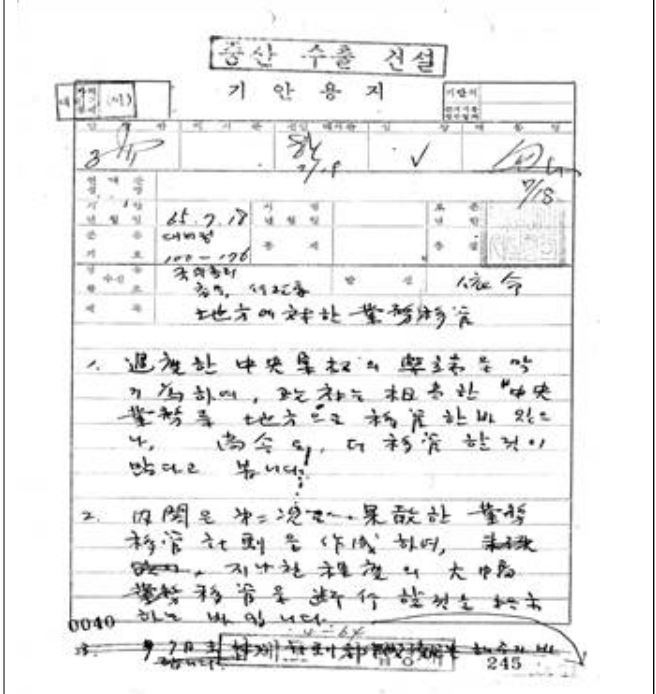
**제헌헌법(이승만 대통령, 1948)**  
 정부수립 이후 지방자치제도는 제헌헌법에 관련 규정이 제정되며 시작되었다. 제헌헌법 제8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의원선거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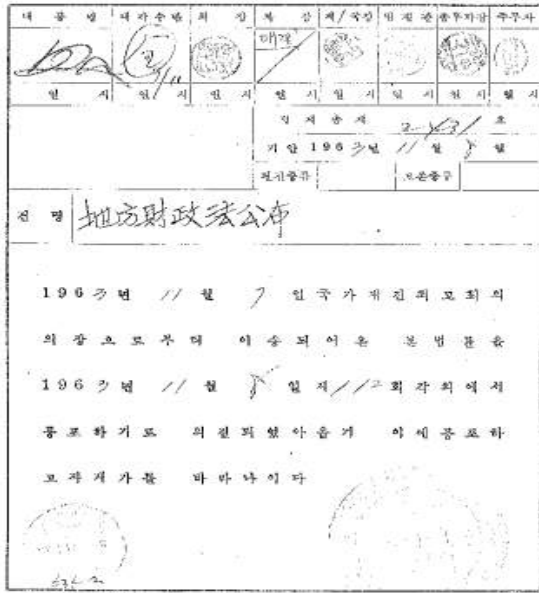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이승만 대통령, 1949)**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법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서울특별시·시도와 시·읍·면의 2계층으로 두고, 서울특별시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시·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지방자치법개정법률(제563호)(윤보선 대통령, 1960)**  
 1960년 11월 1일 국회 의결로 확정된 지방자치법 개정법을 공포 문서다. 이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음으로 모두 주민직선으로 선출되었다.



**지방에 대한 업무 이관(박정희 대통령, 1965)**  
 중앙에서 직접 관장할 특수업무는 극도로 제한하여 과감하게 지방에 권한을 위임하고, 중앙정부는 감독만 하는 방향으로 행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165

13465

**지방재정법 공포(박정희 대통령, 196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회계에 관한 통일적 질서를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大 統 領	
政務首席	秘書室長
孫	李

地方議會議員選舉 實施計劃

'91. 2. 21

政 務  
(曹海寧 秘書官)

26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계획(노태우 대통령, 1991)**  
지방자치를 조기에 실시하되, 선거 준비가 부족한 광역의회선거는 5월 이후로 미루고, 정당 참여가 배제된 기초의회선거를 3월 중에 먼저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게 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선거 실시에 즈음한  
대통령 특별담화문

5/30 20:00 국무대 자택  
대통령비서실

210

**지방선거 실시에 즈음한 대통령 특별담화문(김영삼, 1995)**  
1995년 6월 27일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을 함께 선출하여 전면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된 의의를 밝힌 담화문이다. 34년 전 중단된 지방자치를 임기 중 부활시킨 것에 대한 긍지와 함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이룩하는 주민자치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1996년 1월 19일

국무총리 이우성

- 국무위원총무처장관 김기영
- 국무위원 장관
- 국무위원 장관
- 국무위원 장관
- 국무위원 장관

96

14898

97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규정(제14898호)(김영삼 대통령, 1996)**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정책의 종합적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 신설에 관한 문서다. 이후 설치된 지방자치행정혁신위원회, 분권촉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전신에 해당하는 조직이다.

「地方分權과 國家均衡發展」의 具現을 위한 基本構圖

I. 序 論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3년반 운영경험을 교훈으로 삼고
- 새 정부가 표방하는 의지와 통치이념을 기반으로 하여
-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올바르게 실현시킬 그랜드 디자인을 작성·보고드림

II. 地方分權과 國家均衡發展의 指向目標과 核心主題

□ 지방목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및 재원을 적절히 재배분 함으로써
  - 자율적 참여와 창의적 노력을 진작하고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 지방자치의 건전한 확장과 발전을 보장함
- 국토 전 지역의 성장을 等時的으로 촉진하고 지역별로의 특성화를 촉진함으로써
  - 각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 발휘케 하고
  - 인구 및 산업의 분포와 활동을 평준화시키며
  - 수도권 과밀과 비수도권 과소의 폐단을 제거함
- 통치권과 경제력을 연계시켜 그 분담과 효과를 고르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 국토와 국민의 보유 에너지를 최대한 활성화, 고도화 하고
  - 정치·경제·문화 등의 제 부문에서 선진국 진입을 촉진하며
  - 남북 통일의 자주적 역량을 충분히 확보토록 함

6

5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안 보고

2004. 9. 2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과 국가적 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한 기본구도(김대중 대통령, 2003)  
지방이양추진위원회 3년 반의 운영경험을 통해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기본원칙으로 분권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립의 원칙, 분업의 원칙, 균형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안 보고(노무현 대통령, 200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작성한 2004년 지방분권 5개년종합실행계획안 보고 문서다. 47개 정책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으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실천 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계획이다.

시도지사 재 시도지사 회의  
- 국가 균형발전 추진전략 토의  
2003. 9. 8.(월) 14:00~16:00 / 부산시청  
중대연설

다극거점 개발 계획. (홍익기 기증)

개발사업 → 행정사업

강력한 추진기구  
기획. 정책. 위임형  
국가균형발전부 신설

통치사업

개발사업  
개발사업은 5개년 내로  
임시개발 → 지방자치사업  
양대축

지방분권 추진

지방분권 추진 - 영남권 일대

년 월 일

① 행정개혁은 2개년 안에 공공기관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있는가?

② 행정개혁은 영남권이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가능한가?


③ 균형발전

공공기관 이전없이 균형발전 가능할 것인가. 계획 추진의 가능 하였는가?

균형발전 실현 가능성 평가되고 수도권 규제개혁이 가능 행정?

친필 메모(노무현 대통령, 2003.9.8.)  
2003년 9월 8일 부산시청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회의 중 대통령 메모다. "다극거점 개발계획, 강력한 추진기구, 국가균형발전부 or 원, 낙후지역원 명시 등"의 메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친필 메모(노무현 대통령, 2004.10.28.)  
2004년 10월 28일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작성된 메모이다. "행정수도 연관 없이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가능한가?, 균형발전 사실상 중단되고, 수도권 규제개혁이 가능한가?" 등의 의문을 통해 행정수도 관련 대통령의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다.

<p style="text-align: center;"><b>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안)</b></p> <p style="text-align: center;">2008. 11. 27</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분권지원단 (분권 1과)</p>	<p style="text-align: center;"><small>우리 삶을 바꾸는</small> <b>자치분권</b></p> <hr style="border: 2px solid blue;"/> <p style="text-align: center;"><b>자치분권 종합계획</b></p> <hr style="border: 2px solid blue;"/> <p style="text-align: center;">2018. 9.</p> <p style="text-align: center;"> <b>자치분권위원회</b></p>
<p><b>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안)(이명박 대통령, 2008)</b> 이명박 정부의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문서다.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지방이양사무 발굴, 중앙행정권한의 포괄적·일괄적 이양 등의 추진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p>	<p><b>자치분권 종합계획(문재인 대통령, 2018.9.)</b>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작성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다.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6대 전략 33개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이다.</p>

**붙임3**

**역대 대통령과 지방자치 선거 투표**



시의원 투표 모습 (이승만 대통령, 1956)  
(CET0022818)



광역선거투표 (노태우 대통령, 1991)  
(CET0013284)



지방자치단체장 투표 (김영삼 대통령, 1995)  
(C000005510006572)



6.13 지방선거 (김대중 대통령, 2002)  
(C000005610013487)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노무현 대통령, 2006)  
(C00000011000419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이명박 대통령, 2010)  
(C000009410199558)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박근혜 대통령, 2014)  
(C000068710230839)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문재인 대통령, 2018)  
(C000081310009533)